

보건복지 ISSUE & FOCUS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www.kihasa.re.kr

제 306호 (2016-06)
발행일 2016. 02. 22
ISSN 2092-7117

발행인 김상호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0147)세종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층~5층) TEL 044)287-8000 FAX 044)287-8052

생애주기별 소득·재산의 통합 분석 및 함의¹⁾



여유진
기초보장연구실 연구위원

- 생애주기별 소득·재산 분포의 특성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요약됨.
- 첫째, 소득과 재산 모두 장년부와 두 자녀로 이루어진 가구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며, 청년기와 특히 노년기에 낮게 나타남. 둘째, “소득 빈곤-재산 부유” 노인의 비율은 높지 않으며, 노인의 ‘상대적’ 재산수준은 OECD 회원국들과 비교할 때 낮은 편에 속함. 셋째, 소득과 재산 모두에서 청년가구 내부의 격차가 확대되는 경향을 보임. 넷째, 소득과 재산의 상관관계가 높아지는 ‘동행화’(同行化)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마지막으로, 재산기준 과부채가구는 2분위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소득기준 과부채가구는 점차 전 계층으로 확산되는 경향이 있음.
- 이러한 분포 특성과 최근 변화에 주목하여 정책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1. 생애주기별 소득·재산 분석의 필요성

- 소득(income)과 재산(wealth)은 분리되어 있지만 상호 연관되어 개인과 가구의 경제적 안녕에 영향을 미침. 따라서 소득과 재산을 통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가구의 복지 수준과 분배 상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음.
 - 최근 통합적 분석의 중요성을 강조한 해외 연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스티글리츠(Stiglitz) 등이 주축이 된 “2009년 경제성과와 사회진보 측정 위원회”에서도 물질적 안녕을 평가함에 있어 소득, 소비, 재산을 결합적으로 고려할 것을 권고하였음(Stiglitz 외. 2009, p.7).²⁾

1) 본 원고는 2015년에 수행된 『한국형 복지모형 구축: 생애주기별 소득·재산·소비 연계형 복지모형 구축』의 일부를 발췌한 것임.

2) 권고안은 물질적 안녕을 평가할 때, 첫째, 생산보다 소득과 소비를 보라, 둘째, 가구 전망(perspective)을 강조하라, 셋째, 소득과 소비를 재산과 결합해서 고려하라, 넷째, 소득, 소비와 재산의 분포를 더 명료히 하라, 다섯째, 소득 계층치를 비시장 활동으로 확대하라는 것임(Stiglitz, J., A. Sen and J.P.Fitoussi (2009). “Report by the Commission on the Measurement of Economic Performance and Social Progr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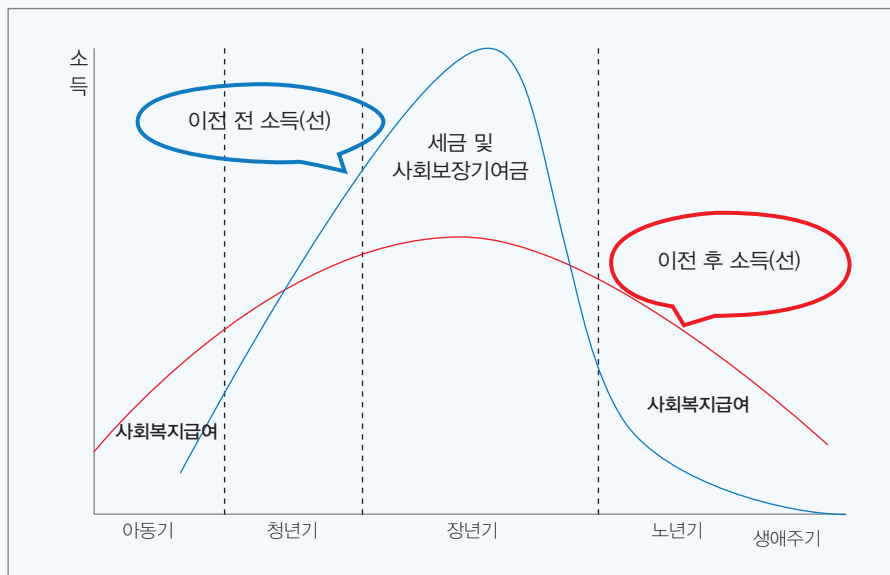
- OECD에서 최근 발간된 보고서들(OECD 2013; Fesseau 외 2013; Denk 외 2015) 또한 소득-재산-소비의 통합분석 틀을 제공하고자 시도하였음.³⁾

■ 한편, 생애주기(life cycle) 혹은 생애과정(life course)⁴⁾에 따른 가구 복지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도 사회복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임.

○ 가구의 복지를 분석함에 있어 생애주기의 고려가 중요한 이유는 생애주기에 따라 소득의 수준과 원천이 변화할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의 이전(transfer) 기능의 중요성이 달라지기 때문임.

○ 사회복지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생애주기 간 소득의 재분배를 통한 소비의 평탄화(smoothing) 기능임. 특히, 계층 간 이전의 문제를 차치한다면, 아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사회복지의 양 날개(아동·청년기와 노년기의 소득보장)에 초점이 맞추어짐.

[그림 1] 생애주기별 소득의 분포



3) OECD. (2013). OECD Framework for Statistics on the Distribution of Household Income, Consumption and Wealth. OECD Publishing; Fesseau, Maryse., Florence Wolff and maria Liviana Mattonetti. (2013). "A Cross-country Comparison of Household Income, Consumption and Wealth between Micro Sources and national Accounts Aggregates". OECD·Eurostat Working Paper No. 52(STD/DOC(2013)3); Denk, Oliver and Alexandre Cazenave-Lacrouz. (2015). "Household Finance and Income Inequality in the EURO Area". OECD Economic Department Working Papers No. 1226;

4) 생애주기는 출생부터 사망까지 개인의 다양한 단계에 대한 생물학적 접근, 즉 생애 주요 단계들을 통과할 때 부딪치는 사회적, 심리학적 변화를 개괄하는 접근으로 간주됨. 이에 비해, 생애과정은 "생애주기보다 더 광범위하며, 과정에 있어 더 사회학적이고, 개인의 생애 단계를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맥락에 배태된 것"으로 간주됨(Yerkes, Mara A., Bram Peper, and Janeen Baxter (2013). "Welfare States and Life Course", edited by Greve, Bent. The Routledge Handbook of the Welfare State. Routledge, p.106).

■ 본 연구에서 『국민생활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2005, 2009, 2011) 원자료를 활용하여 생애주기별 소득·재산의 분포를 분석하고, 그 결과로부터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음.

○ 생애주기별·가구특성별 분석을 위해 12개의 준거가구 유형을 설정하였음.

- 청년단독가구(35세 미만), 청년부부가구(이하 가구주 45세 미만), 청년부부+1자녀가구, 청년부부+2자녀가구, 장년부부+2자녀가구(이하 가구주 45세 이상 65세 미만), 장년부부+1자녀가구, 장년부부가구, 노인부부가구, 노인단독가구(<75), 노인단독가구(≥75), 한부모가구, 기타가구

○ 본문에서는 지면 한계 상 생애주기별 소득·재산 분포의 주요 특성을 중심으로 기술하였음(단, 본문은 비교상태분석이므로, 세대효과와 시점효과를 통제하지 못함을 감안하여야 함).

2. 생애주기별 소득·재산 분포의 특성

■ 첫째, 소득과 재산 모두 장년부부와 두 자녀로 이루어진 가구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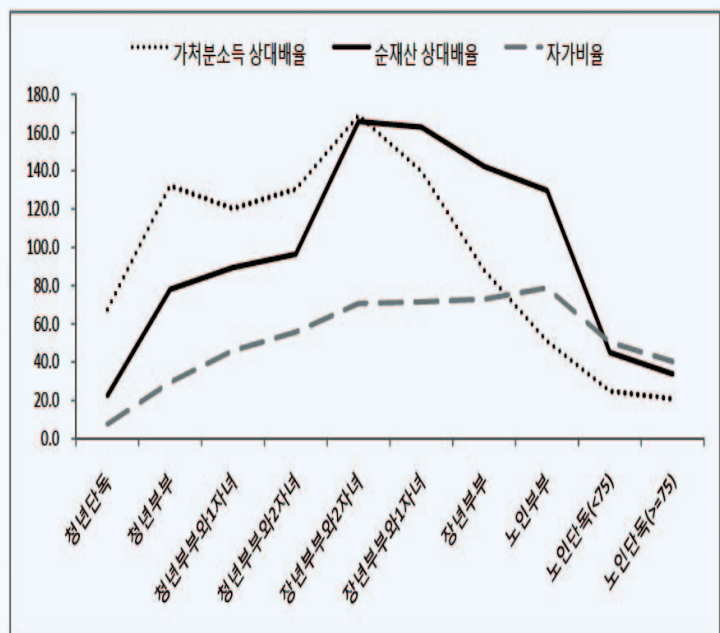
○ [그림 1]에서 보는 것처럼, 가처분 소득의 경우, 청년부부가구에서 크게 상승한 후 완만한 등락을 보이다가, 장년부부와 두 자녀 가구에서 최정점을 이루며, 이후 하락하는 양상을 보임. 특히, 노인가구가 되면 상대 소득 수준은 급격히 낮아짐.

- 재산의 경우도 유사한 경향을 보임. 다만, 노인부부가구의 상대적인 순재산 수준은 129.7로 전체 평균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인 반면 노인단독가구의 재산수준은 전체 가구 평균의 1/3 수준에 불과함([그림 2 참조]).

[그림 2] 가구유형별 소득과 재산의 상대배율(2011년, 전체가구 평균=100.0)

(단위: %)

가구유형	근로 소득	가처분 소득	총재산	순재산
청년단독	71.5	67.6	21.0	22.4
청년부부	147.9	132.3	78.8	78.1
청년부부와1자녀	132.7	120.4	94.3	89.4
청년부부와2자녀	144.6	130.4	99.7	96.4
장년부부와2자녀	184.3	169.0	165.3	165.8
장년부부와1자녀	144.2	139.8	163.3	162.9
장년부부	81.6	88.1	141.3	142.3
노인부부	18.5	51.0	119.0	129.7
노인단독(<75)	5.4	24.9	41.6	45.0
노인단독(≥75)	1.6	20.8	30.7	33.8
한부모	54.9	66.7	39.3	34.9
기타	93.1	94.2	93.0	91.7
전체 가구	100.0	100.0	100.0	100.0



※ 원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국민생활실태조사』.

■ 둘째, “소득 빈곤-재산 부유” 노인의 비율은 높지 않으며, 노인의 ‘상대적’ 재산수준은 OECD 회원국들과 비교할 때 낮은 편에 속함.

○ 앞의 표와 그림에서도 알 수 있듯이, 노인, 특히 독거노인의 경우 소득은 물론이고 재산도 매우 낮은 수준임. 소득은 낮으나 재산은 상당히 보유하고 있는 이른바 ‘income-poor, property-rich’ 노인의 비율이 그리 높지 않음.

- 소득은 하위 40%(1,2분위)에 속하나, 재산은 상위 40%(4,5분위)에 속하는 노인가구의 비율은, 노인부부 가구의 경우 3가구 중 약 1가구(34.0%)로 비교적 높지만, 75세 미만 독거노인의 경우에는 14.0%, 75세 이상 독거노인의 경우에는 10.5%로 그 비율이 높지 않음(〈표 1〉 참조).

〈표 1〉 노인가구 유형별 가처분소득 5분위와 순재산 5분위 교차표(2011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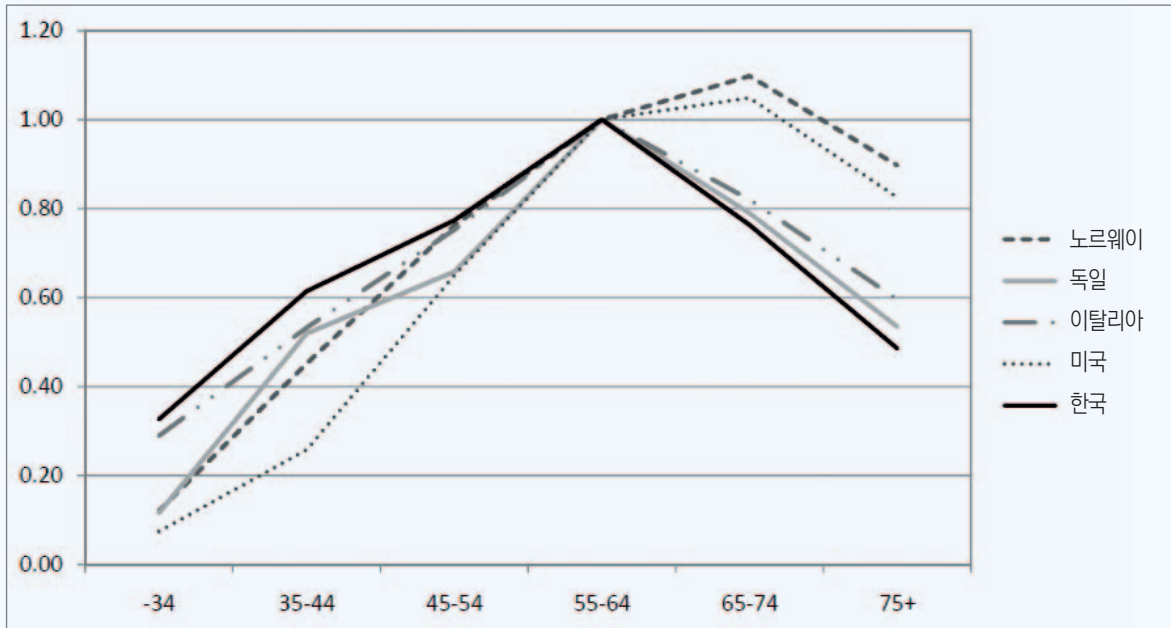
노인부부	소득1분위	소득2분위	소득3분위	소득4분위	소득5분위	계
재산1분위	8.1	2.0	0.2	0.0	0.0	10.3
재산2분위	11.0	5.1	0.9	0.1	0.0	17.0
재산3분위	11.7	9.5	2.7	0.3	0.0	24.2
재산4분위	8.9	10.2	3.0	0.7	1.0	23.7
재산5분위	6.3	8.6	5.1	2.9	1.9	24.8
계	45.8	35.4	11.8	4.0	2.9	100.0
노인단독(<75)	소득1분위	소득2분위	소득3분위	소득4분위	소득5분위	계
재산1분위	36.1	1.8	0.1	0.0	0.0	38.0
재산2분위	23.4	1.9	0.3	0.1	0.0	25.7
재산3분위	18.9	2.0	0.3	0.0	0.0	21.2
재산4분위	5.8	1.8	0.2	0.0	0.0	7.8
재산5분위	4.3	2.1	0.6	0.4	0.0	7.3
계	88.5	9.5	1.5	0.5	0.0	100.0
노인단독(≥75)	소득1분위	소득2분위	소득3분위	소득4분위	소득5분위	계
재산1분위	50.6	0.8	0.2	0.0	0.0	51.5
재산2분위	25.5	1.1	0.2	0.0	0.0	26.8
재산3분위	9.0	1.4	0.1	0.0	0.0	10.5
재산4분위	5.9	0.3	0.1	0.0	0.0	6.3
재산5분위	3.3	1.0	0.4	0.1	0.0	4.8
계	94.4	4.6	0.9	0.1	0.0	100.0

원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국민생활실태조사』.

○ 이러한 결과는 낮은 소득을 보충하기 위해 노년기에 재산을 활용한 결과일 수 있지만, 다른 한편 가족주의 문화의 유산이 강하게 남아 있는 우리나라에서 재산의 세대 간 이전이 노년기에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일어난 결과로 해석할 수도 있음.

- 실제로 우리나라는 청년의 상대 재산 수준이 높고, 노인의 상대 재산 수준이 낮은 이탈리아 등 남유럽과 유사한 연령별 재산 분포를 보임. 이에 비해, 사민주의 국가로 분류되는 노르웨이와 자유주의 국가의 대표 격인 미국의 경우, 34세 이하 청년층의 상대적 재산 수준은 매우 낮고, 노인의 재산 수준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

[그림 3] 주요 OECD 국가들의 연령별 자산 분포 비교



원자료: 한국은 국민생활실태조사(2011년 소득기준)에서 자체 계산, 기타 국가들은 OECD. (2015). In It Together: Why less Inequality Benefits All, p.258.

■ 셋째, 소득과 재산 모두에서 청년가구⁵⁾ 내부의 격차가 확대되는 경향을 보임.

○ 특히, 2003년~2011년 기간 동안 독신청년의 가처분 소득 상대배율은 71.6에서 67.6으로 하락하였으나, 청년부부가구의 상대소득 배율은 동일 기간 동안 108.2에서 132.3으로 크게 상승하였음.

- 순재산의 상대배율 역시, 청년단독가구의 경우 23.0에서 22.4로 거의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데 비해, 청년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52.9에서 78.1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표 2> 청년가구의 소득과 재산의 상대 배율(전체가구 평균=100.0)

(단위: %)

		2003년	2005년	2009년	2011년
가처분소득	청년단독	71.6	72.5	67.9	67.6
	청년부부	108.2	102.4	121.6	132.3
1인균등화된 가처분소득	청년단독	125.5	125.3	116.0	111.0
	청년부부	134.1	125.1	146.9	153.7
순재산	청년단독	23.0	19.8	24.3	22.4
	청년부부	52.9	62.0	63.1	78.1

원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 년도), 『국민생활실태조사』.

5) 유효표본 확보 등의 이유로 청년단독가구는 35세 미만, 청년부부가구의 가구주 연령은 45세 미만으로 설정되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다만, 청년부부 가구주 연령을 35세 미만으로 제한하여 분석한 결과도 경향성에서는 본문과 큰 차이가 없었음.

○ 이러한 독신청년과 부부청년 간 내부 격차 확대는, 소위 ‘스펙’에 따른 결혼시장의 양극화, 동질혼 경향과 결혼으로 인한 소득·재산 시너지 효과의 강화, 그리고 결혼 이후 맞벌이 지속 비율의 증가 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음.

■ 넷째, 소득과 재산의 ‘동행화’(同行化)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2003~2011년 기간 동안 가처분소득의 경우 빈곤율과 불평등도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근로소득과 순재산의 분배 상태는 2003년과 2011년이 거의 유사한 수준임.

〈표 3〉 소득과 재산의 가구단위 빈곤율(중위소득 50% 기준)과 불평등도(지니계수) 추이

(단위: %)

		2003년	2005년	2009년	2011년
빈곤율	근로소득	27.2	26.7	28.6	27.1
	가처분소득	19.6	18.8	18.2	17.4
	순재산	33.4	33.6	33.6	33.3
불평등도	근로소득	0.473	0.468	0.495	0.472
	가처분소득	0.407	0.396	0.403	0.386
	순재산	0.655	0.705	0.657	0.623

주: 소득과 소비지출은 1인 균등화된 값, 재산은 비균등화된 값을 사용하였다.

원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 년도), 『국민생활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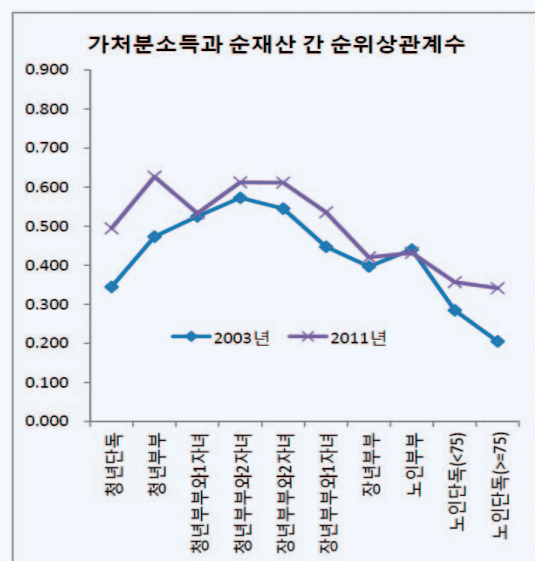
○ 그러나 이러한 개별적 경향과는 별개로, 가구유형별 소득과 재산의 순위상관계수, 즉 상관관계는 동일 기간 동안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특히, 생애주기의 양 꼬리부분에서 소득이 높은 가구가 재산수준도 높고, 소득이 낮은 가구가 재산수준도 낮은 ‘소득과 재산의 동행화(同行化)’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그림 4]에서 보는 것처럼, 2003년에는 소득과 재산 간의 순위상관계수가 ‘역U’자 곡선을 그리고 있었으나, 2011년에는 그 형태가 상당히 완만해졌음. 이는 불평등과 관련해서 새롭게 주목해야 할 지점임.

[그림 4] 가구유형별 가처분소득과 순재산 간 순위상관계수

가구유형	2003년	2011년
청년단독	0.345	0.495
청년부부	0.473	0.627
청년부부와1자녀	0.525	0.533
청년부부와2자녀	0.573	0.613
장년부부와2자녀	0.545	0.612
장년부부와1자녀	0.448	0.536
장년부부	0.397	0.420
노인부부	0.441	0.432
노인단독(<75)	0.285	0.357
노인단독(>=75)	0.205	0.342
한부모	0.387	0.433
기타	0.544	0.5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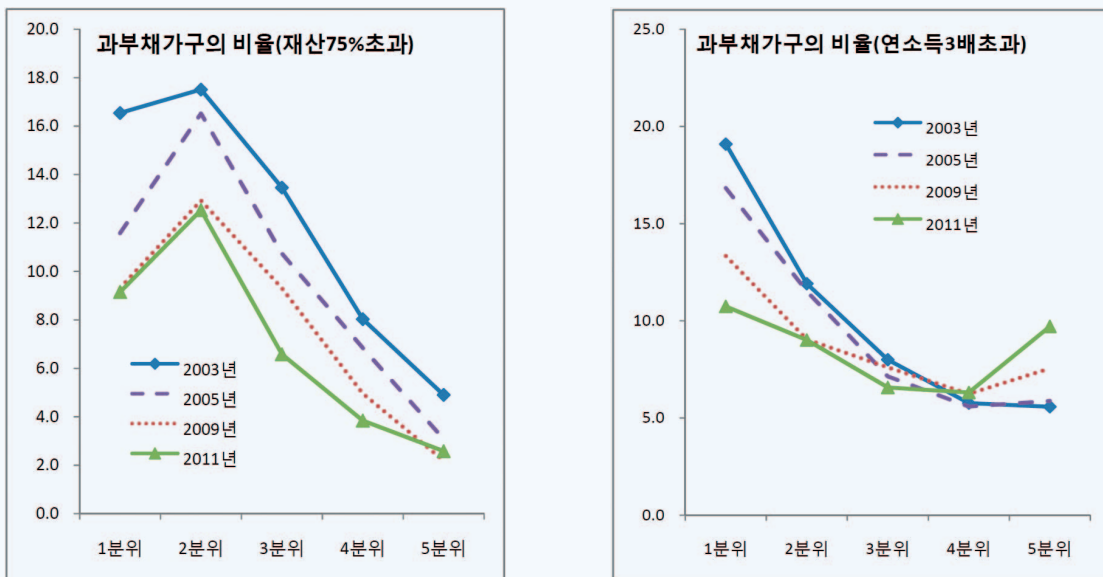


원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 년도), 『국민생활실태조사』.

■ 마지막으로, ‘재산기준 과부채가구’(부채가 총재산의 75%를 초과하는 가구)는 2분위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소득기준 과부채가구’(부채가 연가처분소득의 3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점차 전 계층으로 확산되는 경향이 있음.⁶⁾

- 신용대란 시점인 2003년(12.1%)에 비해 2011년(6.9%) 과부채가구의 비율은 큰 폭의 감소세를 보임. 그러나 소득 2분위 가구 중 12.5%, 소득 1분위 가구 중 9.2%가 총재산 대비 부채의 비율이 75%를 초과하는 과부채 가구로 저소득층의 재산기준 과부채가구 비율이 높게 나타남.
- 2003년의 경우 부채가 연소득의 3배를 초과하는 소득기준 과부채가구의 비율은 전형적으로 저소득층일수록 높고, 고소득층일수록 낮았음. 예컨대, 하위 20%의 과부채가구 비율은 19.1%였으나, 상위 20%의 과부채 가구 비율은 5.6%에 불과하였음. 하지만 2011년에는 하위 20%의 과부채가구 비율이 10.7%로 감소한 반면, 상위 20% 가구의 과부채가구 비율이 9.7%로 증가하여, 두 계층 간 편차가 크게 줄어들었음.
 - 주택가격 급락이나 경기침체 같은 예측치 못한 요인이 도래할 경우, 과부채의 파급력이 전 소득계층에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음.

[그림 5] 가처분소득 5분위별 과부채가구 현황



원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 년도), 「국민생활실태조사」.

6) 과부채(over-indebtedness)가구는 OECD(2015)에서 사용한 정의, 즉 재산 대비 부채 비율이 75%를 초과하는 가구와 연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300%를 초과하는 가구로 정의하였음.

3. 생애주기별 소득·재산 분석의 정책적 함의

- 첫째, 최근 사회복지의 재분배 효과가 증가하고 있으나, 생애주기별 소득평탄화효과는 여전히 낮은 수준임. 이는 소득보장을 가장 필요로 하는 생애주기의 양 꼬리 부분, 즉 독신 청년과 독거노인의 소득과 재산수준이 낮고, 빈곤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는 데서 확인할 수 있음. 노동시장정책과 사회보장정책의 결합을 통해 이 두 집단의 소득보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소득 빈곤율이 높은 노인집단의 자산 활용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그 효과가 생각만큼 크지 않을 수 있음. 특히, 소득은 낮으나 자산은 상당한 노인의 비율은 그리 높지 않으며, 이 경우에도 ‘사적 이전의 구축(驅逐)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즉, 부모의 상속과 자식의 부양 간 암묵적 교환관계를 가정할 때, 노인이 살아있는 동안 주택을 유동화할 경우
 - 현재 노인소득의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 자식으로부터의 사적 이전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음.
- 셋째, 독신청년과 청년부부의 격차 확대는 저출산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문제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정책적 대응이 강화되어야 할 부분임. 이를 위해, 노동시장에서의 격차 축소와 일자리 안정성 제고, 주거복지 강화, 자산형성 지원 등 다양한 대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
- 넷째, 소득과 재산의 동행화 현상이 새로운 불평등의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소득 뿐만 아니라 주택과 자산 형성 차원에서의 대안이 강화되어야 할 것임. 특히,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주거보장과 내집 마련의 안정적 경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임.
- 마지막으로,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되고 있는 가구부채 문제가 저소득층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만큼, 거시적·미시적 차원에서 부채관리에 더 적극적인 관심을 두고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집필자 여유진(기초보장연구실 연구위원)
문의 044-287-818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의 발간자료에서 온라인으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kihasa.re.kr/html/jsp/publication/periodical/focus/list.jsp>